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8.2.22(목)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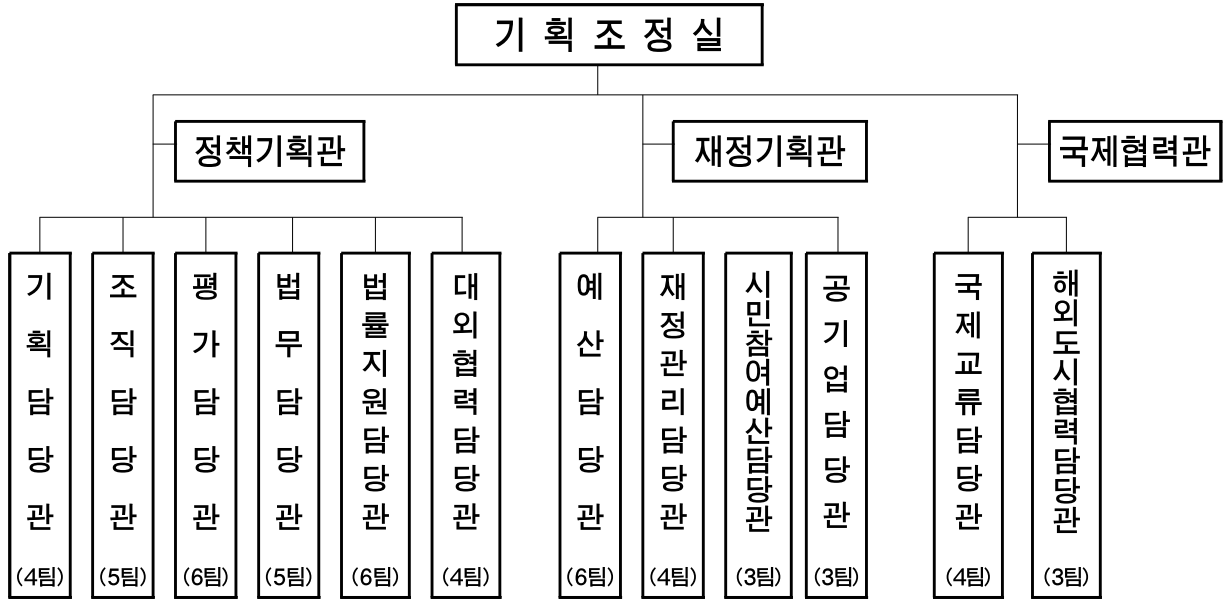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18. 2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2담당관·과, 53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299/279명(정원/현원)

(’18. 2. 22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299 / 279 (140)	253 / 235	38 / 36	1 / 1	7 / 7
기 획 담 당 관	33 / 31 (11)	30 / 28	1 / 1		2 / 2
조 직 담 당 관	31 / 30 (16)	29 / 29	1 / 1		1 /
평 가 담 당 관	33 / 31 (18)	31 / 29	1 / 1		1 / 1
법 무 담 당 관	25 / 24 (14)	23 / 22	1 / 1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9 / 30 (18)	14 / 14	15 / 15		/ 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21 / 20 (7)	17 / 17	4 / 3		
예 산 담 당 관	40 / 34 (12)	39 / 33			1 / 1
재 정 관 리 담 당 관	18 / 17 (9)	17 / 16	1 / 1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9 / 8 (5)	8 / 7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17 / 16 (6)	15 / 14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7 / 24 (14)	18 / 16	7 / 6	1 / 1	1 / 1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16 / 14 (10)	12 / 10	4 / 4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사무위임전결, 지방분권 업무 및 직무발명 등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 ○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관련 업무 총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중기재정계획 수립 ○ 예산성과금 업무 등
재정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 추진, 市 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재정공시 및 분석,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市 민자사업 관리,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국고보조금 총괄 등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 ○ 예산학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채관리 등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계획 수립 ○ 자매우호도시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산 총 규모 : 1조 3,960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2,359,533 (78)	1,395,970 (79)	△963,563
일반회계	927,561 (62)	555,571 (62)	371,990
도시개발특별회계	26,920 (-)	40,674 (-)	13,754
기금	1,405,052 (16)	799,725 (17)	△605,327

○ 일반회계 : 총 5,55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927,561 (62)	555,571 (62)	△371,990
기획담당관	1,035 (3)	1,229 (3)	194
조직담당관	98,699 (10)	85,139 (12)	△13,560
평가담당관	1,727 (7)	2,638 (6)	911
법무담당관	555 (3)	661 (3)	106
법률지원담당관	4,616 (2)	5,924 (2)	1,208
대외협력담당관	3,973 (7)	4,356 (7)	383
예산담당관	186,863 (3)	259,820 (3)	72,957
재정관리담당관	619,345 (7)	183,660 (5)	△435,685
시민참여예산담당관	464 (2)	630 (3)	166
공기업담당관	789 (4)	697 (4)	△92
국제교류담당관	4,051 (7)	5,542 (7)	1,49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444 (7)	5,374 (7)	△70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4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26,920 (-)	40,674 (-)	13,754

○ 기금 : 총 7,99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사업수)	2018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405,052 (16)	799,725 (17)	△605,327
재정투융자기금	654,323 (-)	591,495 (-)	△62,828
감채기금	722,701 (-)	183,161 (-)	△539,540
남북교류협력기금	11,361 (1)	10,875 (1)	△486
대외협력기금	10,973 (15)	13,280 (16)	2,307
지역개발기금	5,694 (-)	914 (-)	△4,780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민선 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
- ②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본격화 및 실행력 확보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 ②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 ③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④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 ①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 ②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 ③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 ④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
- ② (가칭)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거점 마련
- ③ 「세계도시의 플랫폼, 서울」도시외교 강화
- ④ 세계 도시문제 해결로 「정책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

②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본격화 및 실행력 확보

1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정책조정 강화 및 조직·법무·예산 등 종합적 지원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 성과 극대화

□ 시정 주요 정책·현안 조정 활성화로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시정성과 제고가 필요한 정책분야 발굴 및 주요사업 성과 점검
- 부서간 협업·협력 활성화 및 중요 사안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다부서 연계 사안의 경우, 기조실 주도로 총괄 조정 및 대안 도출

□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책조정·조직·법률지원·예산·대외협력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능 확대로 시정 성과 극대화

정 책 조 정

- ▶ 부서간 협업·정책조정·의사결정 지원
- ▶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 강화

조 직 정 비

- ▶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한 기구신설, 정원조정 등 선제적 조직 정비
- ▶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위한 조직진단 및 정원관리 체계 확립
- ▶ 시정연구 활성화로 주요 정책수립 및 현안문제 해결 지원

법 률 자 문

- ▶ 주요 시정분야별 전담 변호사 지정으로 법률지원 강화
- ▶ 중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선제적 법률서비스 제공

예 산 지 원

- ▶ 핵심사업 필요예산 적기 지원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민참여예산제도 혁신으로 재정민주주의 확산

대 외 협 력

- ▶ 시의회·국회·정부·타지자체 등과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 ▶ 국고보조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정부 지속 설득

□ 향후계획 : 실·본부·국 간 정책조정 및 총괄 지원 시행('18.1~계속)

2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본격화 및 실행력 확보

지난해 제정된 기본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중장기행정계획 실행력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추진

□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로 시정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강화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저변 확대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제2차 기본계획수립(2020)기반 마련

□ 추진실적

- 기본조례('17.1)제정, 이행계획('17.4) 및 서울 SDGs 2030 수립('17.11)
 -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서울'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개요 >

- ▶ 의 의 : UN SDGs* 를 서울시 특색에 맞게 재해석한 2030 중장기적 목표
-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구성체계 : 17개 목표
- ① 빈곤 ② 식량,농업 ③ 건강/웰빙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 ⑦ 에너지
- ⑧ 산업화/혁신 ⑨ 일자리/경제성장 ⑩ 불평등 ⑪ 도시/공간
-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자원 ⑮ 육상생태/자원
- ⑯ 정의/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 강북구 등 5개 자치구 대상으로 조례제정 등 컨설팅 실시('17.4~)
 - 강동, 강북, 구로, 도봉, 양천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15.11~'17.11)
 -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37명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 이행계획, 자치구컨설팅 등 검토(총 78회 회의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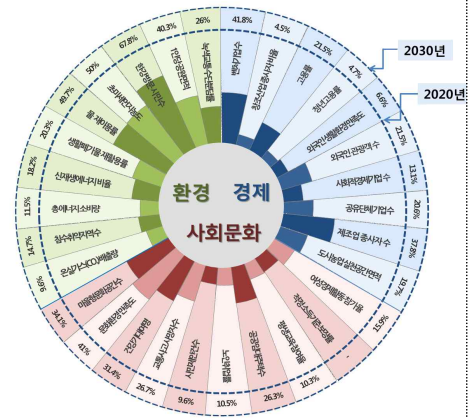
□ '18년 중점 추진 사항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로 시정 지속가능성 제고
 - (지표) 시정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중장기 행정계획) '18년 수립예정인 주거종합계획('18.8), 지역사회보장계획('18.12) 등을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분야별 평가항목에 따라 계획수립 전 검토

< 지속가능발전 지표 점검 >

- ▶ 기간 : '18. 4 ~ 6월
 - ▶ 대상 : 총 30개 지표
 - 환경(10개)·사회문화(10개)·경제(10개) 지표
 - ▶ 방법 : 2020년 목표치 대비 '17년 달성도 평가
 - 목표 달성도 :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 * 100$
 - ▶ 목적 : 시정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및 가용지표 재점검
- ※ 각 지표달성도가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

< 지표 평가모델 : 수레바퀴 모델 >



* 기준연도 :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 바퀴살 :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2013년의 달성도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역량강화 지원(연중)
 - 계획수립·조례제정 등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속 시행('18.4~)
 - 교육교재 및 표준커리큘럼 개발('18.10)로 區 지속가능발전 교육지원

* 자치구 추가 수요조사(3월) → 자치구별 컨설팅 실행(4월~) → 합동교육(9월) → 교육교재 개발(10월)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18. 2. 23 ~ '20. 2. 22)
 -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신규 위촉하여 사회전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표점검, 제2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지원

※ 총 34명 : 위촉직 29명(경제10명, 사회문화10명, 환경9명), 당연직 5명
 ※ 소요예산 : 83백만원(예산사업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추진일정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8. 2월 ~
- 자치구 컨설팅 추가 수요조사 : '18. 3월 ~
- 지표 실적수합 및 점검,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 '18. 4월 ~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②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③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④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1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

□ 추진방향

- 지역재난 대응,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절박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 조성**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지방분권 **중점 과제 추진**
-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로 **지방분권 과제 촉진**

※ 지방분권 관련 정부 주요 동향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17.10.26.) 및 확정('18.4 예정)
- 행정안전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17.12.27.)
 -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에도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제조치 미시행 등

□ 추진실적

- 서울시 지방분권 의제별 정책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적극 건의('17.4.~)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중앙부처 상대로 분권 핵심과제 국가 정책화 촉구
 - ※ 핵심과제(7) : ① 자치조직권 확대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시민참여형 지방분권개헌
 - ④ 중앙의 통제권한 조정 ⑤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⑥ 자치재정권 확대 ⑦ 시행령·규칙 개정
- 서울시 지방분권 선도 모델인 ‘자치영향평가제도’ 지속 추진('17.9.)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심의
- 市분권협의회 운영 및 민관 협력을 토대로 지방분권 시민 공감대 형성
 - 자치구 토크쇼('17.7./6회), 주민자치 주간 토크쇼('17.10.), 재정분권 토론회('18.2.)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 수립('17.7.~)
 - 포럼('17.7.), 자치경찰시민위원회 구성('17.8.), 학술용역 결과보고회('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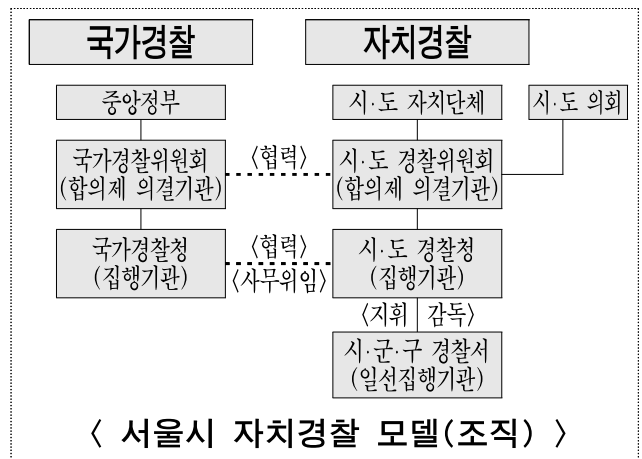
□ '18년 중점 추진 사항

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건의

- 주민자치 지향,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정부·국회 건의
 - ※ 지방분권 국가 천명, 지방정부 법률 제정권, 자치재정권 보장, 국민·시민 참여권 확대 등
- 지방4대 협의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② 조직·인사·예산·사무 이양 등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 촉구

- (조직·단위) 주민혼란 최소화 위해 지방경찰청 이하 자치경찰로 이관
- (사무·권한) 원칙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
- (인 사) 독립적 인사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통해 정치적 독립성 확보
- (신분·재정)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지원



③ 보충성 원칙 하에 중앙권한은 지방으로, 市권한은 자치구로 이양

- 중앙정부 대상 조직·재정 등 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분권과제 우선 이행 촉구
- 조직·사무 등 자치구 이양대상 전수조사, 자치구 대상 사무이양 공모제 실시

④ 불균등한 세입구조(8:2) 개편 및 지방 재정자주권 확대 건의

- 정부안에 국세-지방세 6:4 실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담기도록 지속 요구
 - 실질적 자주재원 확충(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통한 재정책임성 구현
- 지역 간 재정균형 달성 위해 지자체 참여·협의로 재정조정방안 마련

□ 향후일정

- 서울시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3월) 및 17개 시·도 재정분권 공동 건의(2월)
- 전문가 릴레이 기고 추진(2월~), 기획보도·특별대담(2월), 찾아가는 토론회(3월)

2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조화를 통해, 시정 핵심가치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추진방향

- 독립적인 통합 회계감사 실시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적실성·신뢰성 제고
- 민간위탁 제도의 실무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민간위탁 현황 : 345건, 약 7,089억원

(단위 : 건, 억원, '18. 2. 21기준)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45	7,089	317 (92%)	7,014	217 (63%)	5,413	100 (29%)	1,601	28 (8%)	75

추진실적

-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최초 시행('17.3)
 - '17년 10억 미만 150개 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실시 ('18년 10억 이상 대상 확대)
 - 통합회계감사로 감사품질 제고 및 회계감사 수수료 200백만원 절감효과
-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 마련·시행('17.12)
 - 예산집행·정산 세부절차, 회계처리기준 등 마련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고용승계, 통상임금기준, 상근의무 등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사·노무기준 마련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에 제도개선 사항 반영·시행('18.1)
 - 협약 불이행시 제재조치 절차와 기준 마련, 제3자 재위탁과 용역 구분 기준 등 명확화
 - 수탁기관 종사자 공개모집 및 겸직제한 의무화로 인력운용의 공정성·사회적 책임 강화

□ '18년 중점 추진사항

○ 통합 회계감사 대상(10억 미만 → 모든 위탁사무) 단계적 확대 시행

- 10억 이상 사무 중 규모별·분야별로 선정하여 통합회계감사 확대 시범실시
-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파악·보완하여 통합회계감사 대상 단계적 확대 시행

〈 '18년 통합 회계감사 추진 개요 〉

- 감사기간 : '18.2.5. ~ 3.30.
- 수행기관 : 공개경쟁입찰 통한 외부 회계법인 선정
- 감사대상 : 총173개 사무 (10억원 미만 153개 + 10억이상 20개)
총사업비 1,825억원 ※ 기타 사무는 종전과 같이 사업부서별 자체 실시
- 감사내용 : 사업비 집행 적정성 및 세부 집행내역 정산 등 이행감사 실시

○ 관행적 반복 위탁 방지 및 불합리한 재계약 심의 절차 등 개선

- 위탁 개시 7년경과 시 민간위탁방식 계속여부 재검토 후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 재계약 시 민간위탁 적정성(운영평가위) 평가 후 수탁기관 적정성(적격자심의위) 심의

○ 예산·회계, 인사·노무 등 민간위탁 관련 제도 실무 정착 및 지속적 보완

- 표준 운영매뉴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 강화(4회)
- 통합회계감사, 지도·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제도 개선 반영

□ 향후계획

○ '18년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시행 : '18. 2~3월

- 173개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3월말 결과보고서 제출

○ 수탁기관 표준 운영매뉴얼 관계자 교육 실시 : '18. 5·8월

- 통합회계감사 결과 지적사례, 민간위탁 관리지침, 회계기준 등 교육

○ 민간위탁조례 개정 추진 : '18. 6월

- 관행적 반복 위탁 관리 개선, 재계약 심의절차 개선 등

3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추진방향

- 행정심판 운영개선을 통한 재결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 신중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 위원회 운영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정 원 : 50명 이내[현원 : 37명(내부위원 5, 외부위원 32)]
- 구 성 : 매회 8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 회의개최 : 매월 2회(1, 3주 월요일 또는 2, 4주 월요일)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및 자치구 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 소요예산 : 총 259백만원(사업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중점 추진내용

①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상정안건 재결기간 단축 노력
 - 사건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장기 미결사건 관리
 - 생계형 사건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

〈 최근 3년간 재결기간 현황 〉

- 1건당 평균 재결기간 : 98일('15년) → 90일('16년) → 87일('17년)
- 생계형 사건 1건당 평균 재결기간 : 81일('15년) → 73일('16년) → 73일('17년)
※ 재판 진행, 보충서면 계속 제출 등 사유로 150일 초과 사건 제외 시 79.9일(생계형 사건 70.3일)

※ 최근3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15. 1.~'17. 12.)

(단위 : 건, 일)

연도	청구현황	재결 현황		
		총 재결 건수	1회당 재결 건수	평균 재결기간*
2017년	1,614건	1,329건	55건	87일
2016년	1,627건	1,600건	67건	90일
2015년	1,715건	1,363건	57건	98일

*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은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가능(훈시규정)

○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실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행정심판 업무 매뉴얼 보완 및 전입 직원 교육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 자주 쓰는 주요 판례 등 재정비하여 업무 활용

②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추진

○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 증가로 구술심리 및 주·부심 제도 확대 운영

※ 구술심리 및 주·부심 제도 운영 현황('15. 1.~'17. 12.)

(단위 : 건, %)

연도	재결건수	구술심리 건수	주·부심 지정 건수		
			소계	주심	주·부심
2017년	1,392건	86건(6%)	388(29%)	331(25%)	57(4%)
2016년	1,600건	80건(5%)	390(24%)	361(22%)	29(2%)
2015년	1,363건	74건(5%)	338(25%)	326(24%)	12(1%)

○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건축분야 등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3명 신규 위촉

③ 행정심판 주요사례 전파를 통한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

-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 분석 및 주요 행정심판 인용사례 자치구 전파
- 자치구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재결레집 제작 및 배포

□ 추진일정

-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추가 위촉 : '18. 3 ~ 4월
- 재결레집 제작·배포 및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 분석 : '18. 3 ~ 4월
- 주요 행정심판 인용사례 자치구 전파 : 수시

4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신속하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시민 생활속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자발적·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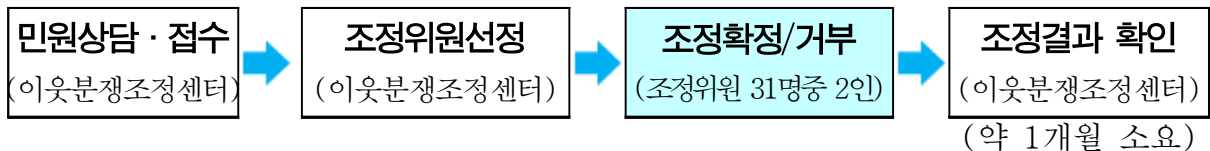
○ 서울시 마을변호사

- 시민이 법률문제를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전담 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동)에 마을변호사 760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상담
- '17년도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방문 상담	전화 상담
계	11,752	8,758	2,994
월평균	978	729	249

○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이웃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적 완충장치
- 상담원(3명)이 분쟁접수 후 조정전문가(31명) 중 2명씩 배정되어 조정



- ▶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소재, 분쟁상담실과 조정실을 구분하여 운영 중

- '17년도 추진실적 (단위 : 건)

총상담건수 (A+B)	조정 실시(A)				조정 미실시(B)			
	계	합의	진행	결렬	계	이관	상담종결	거부
2,052	63	45	13	5	1,989	184	1,669	136

□ 주요내용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체계적 지원으로 활성화 운영

- 법률상담 중심에서 저소득층 법률구조(소송대리 등) 확대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중위소득 125% 이하 시민 법률구조 지원
 - 민사·가사 사건, 행정심판, 임금 및 퇴직금 관련사건, 양육권 사건 등
 - 25개 자치구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과정에서 발굴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
- 시민 인지도 및 마을변호사 자긍심 제고 지속 추진
 - 2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1,900개소에 홍보물 70,000장 배포 완료
 - 기타 시민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물 배포
 - 사례발굴 홍보 및 표창 등을 통하여 마을변호사 참여 동기 유발

②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성 강화

- 건축물 누수, 소음, 동물분야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 확대

- 조정위원 인력풀을 법률·갈등 전문가에서 건축, 소음, 반려견 등 전문분야 확대 운영
- 분쟁 조정시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가 의견 제시 및 이웃간 분쟁해소 지원



- 필요시 현장방문, 현장조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들이 분쟁현장을 방문하여 분쟁내용을 파악 합리적 조정지원
 - 동주민센터 등 분쟁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현장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향후계획

-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신규 위촉 : '18. 3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 '18. 3월~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①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②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③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④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1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상반기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과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계획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 제거
- 경기와 밀접한 SOC·일자리 사업 등 1분기 내 집중 집행·관리
-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집행지연 요인 해소

□ 추진목표 ※ '17년 추진실적 : [1/4분기] 집행률 24.5%, [상반기] 집행률 52.7%

- [1/4분기] 목표 집행액 : 5조 2천억원 / 목표 집행률 : 28%
- [상반기] 목표 집행액 : 10조 8천억원 / 목표 집행률 : 58%

– 2018년도 예산현액 및 신속집행 대상, 추진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집행액	1/4분기 목표 집행액
		대 상	제 외*		
市(본청)	32조 8,640	18조 7,543	14조 1,097	10조 8,775	5조 2,512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중점 추진내용

① 중점사업 신속집행 강화

- [대상사업] 서민생활안정 등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 일자리 사업(1조 1,518억원), SOC사업(2조 1,488억원) 등
- [관리방법] 사업별 공정관리 모니터링 및 실시간 실적 점검
 - 일자리 사업 등 :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로 사업 조기발주 등
 - SOC 사업 : 1/4분기 발주·계약,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②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지원·관리 방안

○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행정안전부)」 적극 활용

- ① 긴급입찰, ② 선금 집행 활성화, 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④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용, ⑤ 민간경상보조금의 월별 교부,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⑦ 일반운영비 집중 관리, ⑧ 신속집행 추진계획 운영 강화, ⑨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⑩ 신속 집행 평가·보상

○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 상시 모니터링

- 일자리 사업 월별 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매월 모니터링

○ 투자사업의 공정관리 철저

- [사업부서]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 [기획조정실]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 진척도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 예산배정

○ 자치구 교부금 등 관련 시 보조금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조정교부금 신속집행 상반기 65% 교부
-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전출금 상반기 65% 전출
- 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업비 상반기 65% 교부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집행률 제고대책 강구

- 월 단위 신속집행 실적 공표 및 월 1회 점검회의 개최
- 명시이월 지양, 사고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조기발주 독려
- 상반기 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높은 시설비 집중 관리
 - ▶ 시설비 이월 현황 : 20.3%('15년)→21.2%('16년)→19.0%('17년)→17.0%('18년 목표)

□ 추진일정

- 신속집행 대상 사업 집행계획 제출(실·본부·국⇒예산담당관) : '18. 2월 말
- 신속집행 추진관련 월단위 집행실적 공개 및 추진독려 : 매월 초
- 상반기 신속집행 종합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 '18. 7월

2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민주주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700억원 이내
 - 참여예산 : 500억원, 협치예산 : 200억원 이내(※ 서울혁신기획관 추진)
- 사업선정 방식
 - (시정분야) 시민제안사업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 ▶ 일반시민(50%) + 참여예산위원(30%) + 예산학교 회원(10%) + 제안자(10%)
 - (지역분야)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市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승인

□ '18년 추진계획

①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참여방식 다양화로 시민참여 확대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사업선정 시 모바일·현장투표 등 참여방식 다양화
- 전 과정(사업 심사 ⇨ 편성 ⇨ 실행 ⇨ 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시민관심 지속 유도
-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를 연중 운영하여 전체예산 의견제시 활동 강화

②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강화 및 절차 보완으로 사업품질 향상

- 컨설팅단 운영,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40여개 소그룹 숙의심사
 - 분야별 3~5개 소그룹을 구성하여 100여회 이상 심도 있는 숙의진행
- 서울시 광역 사업으로 구체화 및 통폐합 추진
- 시민투표 대상 사업수를 감축하여 시민 불편 해소
 - 유사사업 통폐합 등 총회 상정 사업수 100개 이하로 조정 (※ 2017년 217개)
- 시민투표 전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사업 배제

③ 자치구 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전략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17년 7개⇒’18년 15개 내외)
- 참여예산제의 다양성 확보 및 제도 안착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 정성평가 부문 신설로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 가·감점 항목 신설 : 우수실행상 수상 가점, 투표 강요 등 부정행위 감점

④ 시민 역량 강화 위한 예산 교육 및 홍보 확대

- 청년·여성·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시민들의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저변 확대**
 - 참여예산제 홍보, 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낭비 우려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 타 교육과정(시민대학, 시정학교, 협치학교 등) **협업 추진**
- 예산 학교 상설화를 위해 역량 있는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방안 검토
- 블로그 등 SNS를 통한 **참여예산제 상시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시민관심 제고

□ 추진일정(안)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18. 2 ~ 3월
- 시민 참여예산위원 제안사업 심사 : ’18. 3 ~ 7월 초
- 시민투표 대상사업 공고(부적격 사업 이의 제기·조정) : ’18. 7월 초
- 시민투표(온라인·현장) 및 사업 최종 선정(한마당 총회) : ’18. 8 ~ 9월 초
- 예산안 편성 및 시의회 심의 : ’18. 9 ~ 12월

3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운영 내실화·건전성 확보

□ 지방보조금 현황

- '18년도 보조금 예산 : 1,164건(통계목 기준), 8조 1,493억원('17.7조2,954억원 대비 11.7%↑)
 - 공공단체 보조 : 733건, 6조 5,039억원(79.8%)
 - 민간 보조 : 431건, 1조 6,454억원(20.2%)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소계	자치단체경	자치단체상	자치단체자본	교육기관보조	예군육성자본	소계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법정
사업수	1,164	733	461	252	19	1	431	226	12	20	65	76	28	4
예산	81,493	65,039	58,642	4,353	2,040	4	16,454	2,542	288	64	2,533	3,195	1,588	6,244

□ 추진실적('17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인력풀(405명)구성, 전문성 강화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17.7.3), 위원 15명 ▶ 405명(369명, 추가위촉 36명)
 -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개최(13회) : 예산편성 심의(5회), 사업부서 공모사업 심의(8회)
- 공공보조, 민간보조 등 사업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대상 : 860개 사업, 15,018억원(공공 633개/11,561억, 민간227개/3,457억)
 - 평가결과 : A등급 128개, B등급 624개, C등급 108개
- 장기 방치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217억) 일제정리 실시로 예산절감
 - 추진실적('17) : 납부 106억원, 부과취소 44억원, 납부예정 등 57억원

□ 추진방향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강화
-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중점 추진사항

①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보조금 심사체계 이원화, 선별적 집중심사로 심의 내실화
 - 집중심의 : 신규 민간보조사업,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등
 - 일괄심의 : 국고보조, 공공단체보조, 통계목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 ▶ 민관예산협의회 등 타 위원회 심의 제외 건의 → 지방재정법, 예규 개선 요구(행안부)

② 성과평가 :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 심층평가 실시로 사업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심사 → **일몰사업 결정**
 - 심층평가 대상 :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 하위 20%사업(미흡등급)
 - ▶ 자체평가(1차)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평가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속여부 심층심의
- 성과평가와 심층심의 시기 조정, 심의결과와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계 도모
 - 성과평가(사업부서) : 6월 → 4~5월 / - 심층심의(위원회) : 6월

③ 사후관리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체납관리 철저

- 보조사업 종료 후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검토 철저 및 적극적 체납관리
 - 실적보고서 제출(2개월 이내) :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 보조금 반환명령 미이행 시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보조금 **상계처리**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18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수립 : '18. 2월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개정요구(행안부) : '18. 2월
- '18년('17회계연도) 보조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추진 : '18. 3~5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 6~8월

4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市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기여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17년 경영평가 결과 ※ 평가대상 : '16년 경영실적

- 투자기관 : 4개 기관(교통·시설·농수산·SH공사 '다'등급 / 에너지공사 미실시('16.12월 설립))
- 출자·출연기관 : 13개 기관('가'등급 4, '나'등급 6, '다'등급 2, '라'등급 1개 기관)

대상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	세종문화	여성가족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	관광마케팅
13개 기관	나	나	가	나	다	가	나	가	라	나	나	다	가

□ '18년 경영평가 추진내용

- 평가대상 : 20개 기관(투자5, 출자·출연15)의 '17년도 경영실적
※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설립 1년미만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제외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투자기관), 서울특별시(출자·출연기관)
- 평가내용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 투자기관 : 리더십·전략(5%), 경영시스템(10%), 사회적가치(35%), 경영성과(45%), 정책준수(5%)
 - 출자·출연기관 : 리더십·전략(19%), 경영시스템(21%), 경영성과(60%)
- 결과활용 : 사장 연봉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34백만원(평가전문기관 용역수행)

□ 추진일정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18. 4 ~ 7월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대상기관, 주관부서, 행안부 등) : '18. 8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

② (가칭)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거점 마련

③ 「세계도시의 플랫폼, 서울」 도시외교 강화

④ 세계 도시문제 해결로 「정책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1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

평창 올림픽의 남북화해 분위기를 활용,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공감대 확산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발굴·추진

□ 추진방향

- 평창 올림픽의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남북 도시교류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교류사업 발굴·추진

□ 주요 추진사항

-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협력 및 지원(2.12, 서울시청 다목적홀)
 - WT(세계태권도연맹)-ITF(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 합동 시범공연 실시
 - ※ 1월 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측 태권도시범단 시범공연 합의
 -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남북교류·체육 관련자 등 300여명 초청
-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협력 및 지원(2.11,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평창 올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통일부·문체부·서울시 공동주최
 - ※ 1월 15일 '북측 예술단 파견 실무회담'에서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합의
 - 장애인, 다문화·다자녀가족, 자원봉사자 등 대상 초청으로 문화소외계층 관람배려
-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사업 지속 발굴·추진
 -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추진
 - 실현 가능성, 상호 효과성, 대외 파급성 등을 고려한 남북교류사업 발굴·추진
 - ※ 북한 수용가능여부, 대북제재, 지역적 특색·장점 제고, 국내·외 지지 등 고려

□ 향후계획

- 평화·통일 교육 수행 민간단체·자치구 선정 및 지원 : '18. 3월~
- 추진 가능한 남북교류사업 지속 발굴·추진 (남북관계·국제정세 등 고려)

2

(가칭)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거점 마련

종로구 안국동에 (가칭)지역상생교류센터를 조성·운영하여 지역상생 교류사업 전반의 안정적 추진

□ 추진방향

- 시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지역자원 홍보·상생교류 공간 마련
- 지역정보·홍보·특산물 판매 등 지역상생 의 모든 것이 있는 복합공간 구성

□ 사업개요

- 시설개요 :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1층~지하1층(910m²)
 - 임차조건 : 보증금 6.5억, 월 임차료 4천만원(임차기간 : 5년)
- 사업방식 : 직접 운영('19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 소요예산 : 2,420백만원
- 사업내용
 - (정보교류)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 원스톱 제공
 - (상생협력) 시민·관광객,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역 특산품 홍보·판매
 - (네트워크) 서울-지역, 민-관 상생교류 특별 기획전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현황

- 센터 예정지 임대차 계약('18. 1 완료)
- 센터 조성공사(실시설계 2~3월 → 리모델링 공사 4~5월)

<(가칭)지역상생교류센터 층별 배치(안)>

- (지상1층)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및 상생카페(커뮤니티 공간) 운영
- (지하1층) 지역정보 교류 및 지역 전문가 특강, 요리 등 체험이벤트 공간

- 센터 운영 자문회의(MD, 매장운영·지역전문가 등) 운영('18. 1~)
- 센터 명칭 시민공모 및 BI 개발 추진('18.2~4월)

□ 향후계획

- 지역 및 지역상생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8. 4월
- 리플릿, 영상제작 및 주변 관광지 연계 홍보 추진 : '18. 4월
- 준공 및 운영 : '18. 6월

3

「세계도시의 플랫폼, 서울」 도시외교 강화

포용적 성장, 공유도시, 태양의 도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아젠다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주요외빈 초청외교와 국제회의 참석으로 도시외교 강화

□ 추진방향

- 서울의 우수정책을 알리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아젠다를 선도
- 주요인사 초청과 전략적 해외순방으로 서울시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추진실적

- 5개 도시 우호도시 신규체결 ※ 총 62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체결
 - 브뤼셀 수도지역(벨기에, '17.6), 베오그라드(세르비아, '17.8),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 '17.9), 테헤란(이란, '17.10), 파나마시티(파나마, '17.10)
- 서울시 대표단 전략적 해외순방 추진
 - 서울·파리·런던 기후변화대응 공동기자회견,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발표, 런던과 협력 강화를 위한 서유럽(파리, 빈, 런던) 방문('17.3)
 - 모스크바와 자매결연 강화협정 체결, WeGO 제4차 총회 개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유라시아(모스크바, 울라놉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타슈켄트) 방문('17.6)
 - '한국 천주교회 230년' 전시회 참석, 로마 등 주요도시와의 교류강화를 위한 이탈리아(로마, 바티칸, 밀라노, 롬바르디아) 방문('17.9)
 - 시티넷 총회 주재, 델리주와 교류추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3차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한 서남아(콜롬보, 델리) 및 독일(본) 방문('17.11)
 - 파리 기후변화협약 2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파리 방문('17.12)
- 해외 국민 등 주요인사 서울시 방문
 - 벨기에 공주('17.6), 우즈베키스탄 부총리('17.8)
 - 일본 전총리, 스웨덴 통상부 장관, 필리핀 외교장관('17.9)
 - 베트남 수석 부총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스리랑카 대통령('17.11)

□ 중점 추진내용

① 평창 패럴림픽(3.9~18) 연계 외빈초청으로 글로벌 소통강화

- 자매우호도시 시장 등 서울시 초청·방문('18.3)
 - 프랑스 파리시장 : 도시공간 및 대기질 개선 협력 MOU체결
 - 독일 본시장 : 본시와 교류강화 및 우호도시 협정체결
 -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16개 도시 58명 해외도시 시장 등 초청
- 서울-베이징 제3차 통합위원회 개최('18.3.19)
 - 베이징시장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 참석 계기로 통합위 연계 개최
 - 통합위 4개팀(경제, 문화, 교육, 환경) 업무보고와 관련 협약서 체결 등

②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해외순방 추진

- 충칭시 및 동북3성 등 중국 전략도시와 교류 강화('18.9)
 - 충칭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향후 남북 통일, 정치·경제, 문화관광,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한 협력 추진
- 부에노스아이레스 U20 창립총회 참가 등 남미지역과의 전략적 교류 강화('18.10)
 - 부에노스아이레스(U20 도시정상회의 참석), 멕시코시티(WeGO 지역본부 개소식) 등
-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중국방문('18.11)
 - 한류스타 콘서트, 서울 체험형 홍보부스 운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등을 위한 동유럽 순방('18.12)
 - 키예프(우호도시 협정체결), 베오그라드(상호도시의 날 개최 및 정책 공유 포럼 개최 등)

③ 시민에게 자매우호도시 문화체험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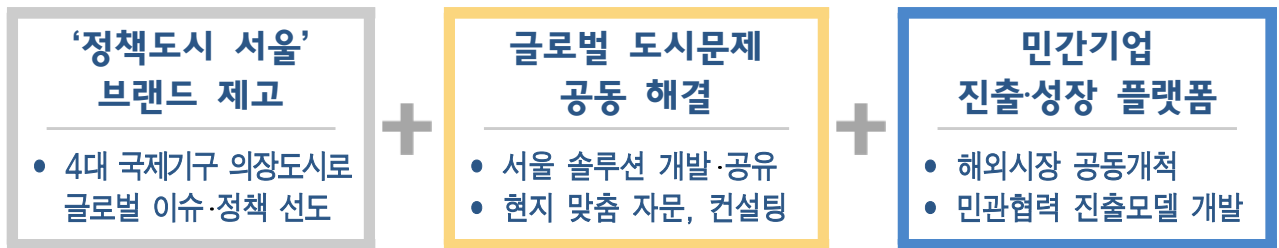
- 지구촌 나눔한마당 개최로 시민의 글로벌 문화 체험기회 확대('18.9)
- 해외문화를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해외국가·도시의 날 개최
 - 캐나다의 날('18.5), 아세안의 날('18.9), 인도네시아의 날('18.9), 중국의 날('18.10)

4 세계 도시문제 해결로 「정책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서울형 정책모델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4대 국제기구 의장 도시로서 글로벌 이슈·정책을 선도하여 「정책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민관협력 기반 전략적 정책공유 추진으로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활성화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사업개요

- 서울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정책과 경험을 해외도시와 공유 및 전수
-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프로젝트 개발 및 국내기업 수주지원
-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 소요예산 : 5,374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1,487백만원),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3,887백만원)

□ 추진실적

- 몽골 지능형교통시스템 중·장기계획 수립 등 10개 사업 해외진출
 - － 지능형교통시스템(올란바토르, 반둥, 나이로비), 도시철도(자카르타, 호치민), 빅데이터(부에노스아이레스, 키예프), 세무시스템(반둥), 콘텐츠개발(개발도상국)
- 온라인학습프로그램 「서울캠퍼스」 개발로 정책공유 채널 다양화
 - － 교통 등 8개 분야 16과목, 72강의/1강의당 10분 (기간:’17.6 ~12월)

- **중앙정부 · 국제기구 플랫폼 등을 활용, 우수정책 공유 추진**
 - 행안부 공공행정사절단, 세계은행 메트로랩, 시티넷 총회, 메트로폴리스 총회,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클린에너지포럼, KOTRA 글로벌프로젝트플라자 등 참가
- **국제기구 4개소 유치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유엔아동기금 서울사무소('17.1), 세계은행그룹 서울연락사무소('17.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17.5), 휴먼라이츠워치 서울사무소('17.5)

□ 추진계획

- **타깃도시 맞춤형 정책수출로 지속적 성과 창출 : 10개 신규사업 추진**
 - (타슈켄트) 디지털시장실, (키예프) 스마트시티, (콜롬보) 세무관리시스템, (자카르타) 대중교통시스템 체계개편, (캄팔라)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
 -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으로 사업개발 및 재원확보
 - ▶ 세계은행(녹색성장기금), 아시아개발은행(지식협력기금), 과기정통부(정보화컨설팅) 등
- **해외수요 맞춤형 정책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공유 플랫폼 활성화**
 - 스토리 형식의 흥미 있는 ‘市 우수정책 레터’ 매월 2건 제작·배포
 - UNDP 등 국제기구와 협약 체결, 시티넷 회원도시 정책등록 의무화 등으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실효성 높은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유엔인구기금,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유치
 - 유치 대상 국제기구 지원 기준 및 공간 확보 방안 마련
- **우리시 소재 국제기구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제기구간 네트워크 강화**
 - 연2회 이상 국제기구 간담회 및 서울소재 국제기구 홍보전시회 개최 등

□ 추진일정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계획 수립 : '18. 2월
- 서울시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 공유 및 해외진출 : '18. 2~12월

2018년 서울시 조직문화 혁신 추진 보고

2018년 서울시 조직문화혁신 추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층진단·처방과 함께, 실·본부·국 내부의 직원이 직접 과제 발굴·개선하는 방식으로 직원체감도 및 효과성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전 직원의견 수렴을 통한 시 전체 공통과제 발굴 방식('14~'17)을 넘어, 개별 실·본부·국 현장문제에 대한 맞춤형 핀셋 대책 요구 증대
- 증가하는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대 간 소통활성화를 통해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필요

※ '81~'00년 사이 출생자로, ① 디지털기기(IT)에 능숙하며 ② 삶의 질과 동기부여 등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세대

◆ 서울시공무원 중 밀레니얼세대의 인원 수 : 최근 5년간 3배 증가
- '12년 657명(6.2%) → '17년 1,964명(18.2%) (출처: 서울시 e-인사시스템 통계자료)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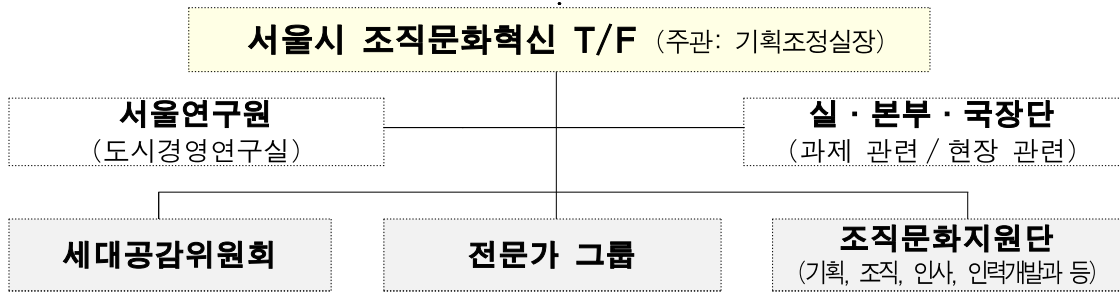
- 서울시 자유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 및 간담회 : '17.9~10월말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23개 발표 : '17.11.1~12.15.
- '18년 조직문화혁신대책 전문가 자문회의(4회) : '18.1월

□ '18년도 추진방향

	대상	절차	시각	의사결정
2017	시 전체 공동과제 중심	기획조정실, 행정국 주도	조직내부 관점	기획·인사 부서장
2018	현장중심 과제	현장 직원+기관장 참여 기관별 주체적 문제해결	외부 전문가+내부 통합 관점	현장직원 중심

운영체계 : Two Track 방식

Track I : T/F 중심의 변환된 서울시 조직문화상 정립



- T/F 구성 및 역할

구성	역할
세대공감위원회	· 올바른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과제 수행 및 제안, 의견수렴 창구 · 5급 이하 직원 중 신청을 통해 연령대별 (20~50대) 동수로 구성
전문가그룹	· 세대공감위원회 및 현장컨설팅단 교육, 멘토 역할수행 · 국내·외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공유·발제
조직문화지원단	· T/F구성 및 세대공감위원회 활동지원, 현장컨설팅단 운영

Track II : 실·본부·국별 현장과제 해결

- 현장별 워크샵 운영 : 현장에서 직원 참여로 개선이슈 선정 및 실행방안 마련
- 현장컨설팅단이 전 과정(설문조사, 조직진단, 워크샵 진행 등)을 지원 관리

■ 조직진단 및 분석 → 현장 개선이슈 선정 → 현장 개선방안 도출 → 과제실행 → 평가

※ 현장컨설팅단 : 전문컨설턴트 + 인사과 + 조직담당관 + 인력개발과 + 서울연구원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이행점검

- '17년 조직문화혁신 실행과제(1~23호) 추진현황 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주 단위 초과근무모니터링으로, 과로직원관리 및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추진

향후일정

- 서울시 조직문화혁신 T/F구성 및 운영 : '18.3월 ~
- 조직문화개선 현장 컨설팅단 구성·운영 : '18.3월말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재위탁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재위탁 보고

수탁기관의 종합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도입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18.3.11)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 위탁현황

○ 위탁개요

위탁사무명	現 수탁기관	소재지	위탁기간	유형	시의회 동의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주)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강남구 개포동 개포로 621	'15. 3.13 ~ '18. 3.11 (1회)	사무형	'14. 12월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위탁기간 : '15.3.13 ~ '18. 3.11(3년)

- '18년 1차 종합성과평가 수행기간 소요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3.11 → 4.10)

※ '18년 2·3차 종합성과평가는 공개모집 이후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수행

○ 위탁사무 : 연 5억원 이상 위탁사무 종합평가 실시(위탁종료 90일전)

- 재정운영실적, 인력관리, 근로여건 등 수탁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별 목표대비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등

○ 평가방법 : 사무특성을 반영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 수탁기관·담당부서·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한 평가지표 마련
-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점검, 담당부서 자체평가 실시

□ 추진실적

○ 3년간 총 114개 민간위탁 사무 평가 추진 ('17.12월말 기준)

- '15년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한센병 관리사업 등 36개 사무
- '16년 : 녹색기업창업펀드 조성·운영, NPO지원센터 등 47개 사무
- '17년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영어마을 수유캠프 등 31개 사무

○ 평가결과 60점미만인 경우(7개 기관) 재계약 배제 반영

※ 중소물류·정신건강·아스피린센터, 위레터널, 파트너스하우스, 여성능력개발원,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 점수분포 】

(단위:개소)

계	90~100점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미만
120	6	53	43	11	7

※ 다산콜센터는 2개, 마이크로크레딧 사무는 6개 기관이 나누어 위탁(기관별 별도평가)

□ 재위탁 개요

○ 재위탁 사유

-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은 공개모집 원칙
- 사업참여 기회확대 및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 갖춘 법인대상 공개모집

○ 위탁기간 : 협약체결시 ~ 2020. 12. 31(3년 이내)

- 수탁 종료시점 조정(3월→12월)을 통해 효율적 수탁사무 운영
- ※ 평가기간(1~12월) 도중 평가기간 변경 시 평가 업무단절 방지

○ 위탁내용 : 연 5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18년 : 36개 사무, '19~'20년 : 평가 전년도 10월 대상 확정
- ※ 5억미만 사무의 경우 부서의 요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종합성과평가 가능

○ 위탁비용 : 170백만원('18년 4~12월 36개 사무 평가 기준)

- 총 위탁예산 222백만원 중 1차 평가(11개 사무) 예산 52백만원 제외

그간 추진경과

- 객관적 수탁사무 평가를 위해 종합성과평가제(조례개정) 도입 : '14. 5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14. 9월
- 종합성과평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4. 12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 '15. 3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 '15.3월 ~ '18.3월

□ 추진일정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 '18.3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 '18.4월
- 협약체결 : '18.4월
- '18년 제2·3차 종합성과평가 추진 : '18.4 ~ 11월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1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1	52	27	2	-
	시정· 처리요구사항	34	16	17	1	-
	건의 사항	16	5	10	1	-
	기타(자료제출 등)	31	3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받고 있음.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서울시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받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회계 및 집행기준 수립을 추진('17.8.~11.)하여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회계감사 절차를 마련 배부하였음 ○ '18년에는 위탁금 10억 원 미만(153개)뿐만 아니라 10억 원 이상 위탁사무 중 규모별·부문별 대표사업 20개를 추가 선정하여 173개 위탁사무에 대해 통합회계감사를 추진 중임('18.2.~3.) ○ 기타 사업부서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10억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인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지정토록 안내('17.12.)하였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에는 위탁금 10억 미만 사무(153개) 및 10억 이상 사무 중 규모별·분야별 추가 사무(20개)에 대한 통합회계감사를 시범실시하고, ○ 문제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향후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경우 매년 회계법인이 교체될 경우 정확한 사업비 분석 및 감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회계감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3년 정도는 동일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상 회계감사의 장기계속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상 장기계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재무과 의견), 현행대로 1년단위 계약 불가피함 ○ 다만 2016년, 2017년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법인선정 심사결과(민간전문가 심사) 동일 회계법인이 선정 되어 정확한 사업비 분석 등 회계감사의 일관성,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최근 서울시공무원 자살 사건과 관련 조직문화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초과 근무에 따른 부담감 해소 등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p> <p>(총괄:기획담당관, 협조: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포털 내 자유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17.9~10월) ○ 조직문화 혁신 대책 마련 관계회의 및 간담회(~'1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정례조례, 직렬·직급별 소통간담회, 혁신대책 과제 발굴 회의 등 다수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발표(1~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전 직원이 자유롭게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향식 방식의 실행과제 수립 및 시행 - 3대분야(① 인사제도 개선, ② 업무부담완화, ③ 직원사기 제고) 23개 실행과제 추진 ○ 조직문화 혁신대책 23개 실행과제의 보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직원의견수렴 진행 ('18.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과제에 관해 직원간 소통을 통한 실행과제의 효과성 제고 및 직원체감도 향상 도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제 보완 및 개선사항 직원의견 정리 : '18.1월말 ○ 조직문화 혁신 T/F 구성·운영 :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그룹(희망자), 전문가그룹, 집행부서 참여 - TF에서 기존 과제(23개) 보완과 신규과제 발굴 논의 -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특강(전문가) - 서울시 조직문화 개선사례 공유 ○ 현장컨설팅단 운영 : '18.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컨설턴트, 인사과, 조직과, 인력개발과 - 현장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통해 직원이 직접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해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연구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해임처분 받았음에도 절차에 없는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였음. 의결된 처분이 적정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서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으로 의결하되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고, 연구원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당사자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근로 기준법의 해고 예고 통보기간(30일) 범위 내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면직 처리할 것을 권고함. ○ 당사자에게 해임 및 해임 예고기간을 통보(2016. 3.21.) 하였으며 해임 예고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여성, 노동,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 조사관 제도(옴부즈만) 신설 - 고충처리담당관(내부 전문가)을 임명하여 직원 폭력 상담 및 신고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신설 - 기관장 핫라인 설치 및 부서별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폭력예방을 위하여 노력 ○ 향후 비리가 발생할 경우 연구원 내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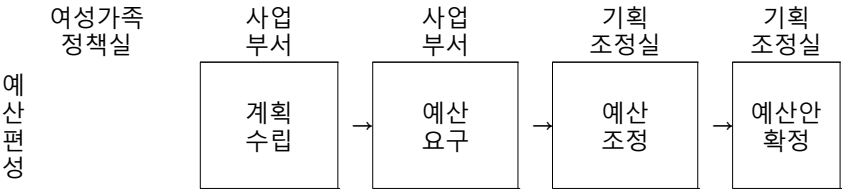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 적용이 각 기관마다 상이함,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여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상의하기 바라며 향후 기관들 모두 동일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정보공개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요구자료 관련 가이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원·국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된 법령(개인정보보호법 포함)을 정리하고 요구자료의 대상, 범위, 기한, 제출한계, 질의회신 및 법령 해석례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는 요구자료 작성기준을 마련 -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요구자료 답변부서의 곤란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부서의 의견을 수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자료 답변부서 의견수렴 : '18. 2월 중 ○ 요구자료 작성 가이드 마련 : '18. 3월말 ○ 가이드 배포 및 실본부국 담당자 교육 : '18. 4월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우리 시의 시금고인 우리은행 경우 특혜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었음. 그러나 서울시와 민간위탁 등 각종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서울시 정책기조와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범죄 등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 조항은 없음. 우리 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의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만들고 향후 협약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종사자 채용 시, 시 공무원 퇴직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7.12.)한 후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표준협약서에 각 반영하였음('18.1.) ○ 협약불이행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제재 기준을 보완하였음('18.1.) <p>※ 협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596 891 1426 1048"> <thead> <tr> <th>최초 조치</th> <th>1회 위반</th> <th>2회 위반</th> <th>3회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개선명령</td> <td>기관장 등 징계 건의</td> <td>재계약 심사 시 감점</td> <td>재계약금지</td> </tr> <tr> <td>서면경고</td> <td>이행보고서 제출</td> <td>기관장 등 징계 건의</td> <td>재계약 심사 시 감점</td> </tr> </tbody> </table>	최초 조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개선명령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 시 감점	재계약금지	서면경고	이행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 시 감점
최초 조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개선명령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 시 감점	재계약금지										
서면경고	이행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 시 감점										
<p>○ 서울시 업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급격히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음. 이런 경우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이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조직진단팀 신설 및 실무인력 확충('18. 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급격한 업무량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진단시스템 구축 - 서울연구원과 협업기반 정원운용 합리화를 위해 조직담당관 내 '조직진단팀' 신설 ○ 격무·기피 부서 해소,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5급 이하 실무인력 373명 확충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요 업무, 기능 감소 등에 따른 적정규모 인력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조직담당관 협업으로 상시 모니터링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기술연구원이 생긴다면 주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방재를 담당할 것인데 매몰비용 등을 생각하면 모든 분야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p> <p>기술적인 분야를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총괄 : 안전총괄과, 협조 :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술연구원은 기후환경 변화, 초고층 건물 증가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 기술분야에 특화된 전담연구기관으로 향후 전문화된 연구수행으로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것임 ○ 설립 후에도 서울연구원과 정기적인 회의, 상호 공동 연구 추진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술연구원 창립총회 개최 : '18. 2월 ○ 서울기술연구원 설립허가·등기 : '18. 2~4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장애인들이 취업하기는 비장애인들보다 굉장히 힘들어 장애인 고용률을 3.2% 법정 의무로 해서 정해놓는 것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고용률이 미달되는 기관들이 있음.</p> <p>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특히 장애인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신체적 활동이 없는 연구원 등도 그럴 것으로 판단됨.</p> <p>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법정고용률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총괄 : 공기업담당관 협조 : 장애인복지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법정의무를 준수 및 고용부담금 제로화 추진(장애인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업, 일자리 발굴 컨설팅 실시 후 장애인 확대 채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한 기관 우선 실시 ○ 장애인 직업기관 연계 장애인 고용 확대 기반 조성(장애인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활용, 투출기관별 직무분석 실시 및 연차별 고용계획 수립 ○ 투자출연기관 성과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실적 평가(공기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성과평가('17년 실적)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배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0.5점 배점 → 1점으로 확대(0.5점+α(최대 0.5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법정 고용률 준수여부 점검(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정례회의 시 안전 상정 및 고용률 준수 독려(공기업담당관) - 기관 연차별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실적 모니터링 등(장애인복지정책과)
<p>○ 시민예산성과금 제도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건수 차이 및 포상금에도 차이가 많음.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기 바람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우수사례 관련 정보 제공 등 대시민 교육·홍보 ○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접근성 향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시민 교육·홍보 강화 ○ 예산낭비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및 시정홍보매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홍보 ○ 비영리 민간단체 활용 대시민 예산낭비신고 홍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6년 이상 연임 및 4개 이상 중복하여 위촉하는 것은 조례상 불가능함에도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와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조례상 6년 연임금지를 어긴 것 같음. 시정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은 없으나 6년 초과 연임한 위원이 1명 있으므로 임기만료 시점('18.3월)에 위원교체 추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 중 6년 초과 연임한 위원이 7명이므로 임기만료 시점('18.1월) 위원 교체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교체('18. 3월)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18. 2월)
<p>○ 참여예산사업 약 2천건 이상이 선정되어서 올라오는데 사업 심사대상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사업심사가 가능한지 단순한 민원성 사업들의 경우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사업심사 및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민간전문가, 시의원, 자치구 의견 수렴('17.9~현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2. : 시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실국 단위별 성인지 예산 편차가 큼. 추후 평가 결과가 조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목표와 사업예산 또한 다르게 나타남.</p> <p>(총괄 : 예산담당관, 협조 : 여성정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로 성인지 사업설명서 작성 및 첨부 절차 신설 - 사업부서 :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성인지 사업 기재 및 성인지 사업설명서 첨부 - 예산담당관 : 사업별 설명서에 “성인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성인지 사업 설명서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여성가족정책실 사업부서 사업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2017년도 신설 절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④</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신청 및 수혜분 석 표준 매뉴얼 작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인지적 관점 반영</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설명서 성인지대상 기재사업설명서 작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인지 예산안 작성, 예산 반영</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인지 예산안 확정</td> </tr> </table>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여성정책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은 여성(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는 구조이므로 실·본부·국별 예산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다만, 실·본부·국별 성인지사업 선정 시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예산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담당관의 성인지사업 선정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음 ○ 다만, 사업예산의 성과목표(지표)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는 작성 기준이 달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치하도록 노력해 가겠음 - 사업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정책사업목표별로 해당 성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성과지표(행안부 예규 제 10호)를 설정 - 성인지 성과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결과와 실적치를 참조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①	→	②	→	③	→	④	→	⑤	사업신청 및 수혜분 석 표준 매뉴얼 작성		성인지적 관점 반영		사업설명서 성인지대상 기재사업설명서 작성		성인지 예산안 작성, 예산 반영		성인지 예산안 확정
①	→	②	→	③	→	④	→	⑤											
사업신청 및 수혜분 석 표준 매뉴얼 작성		성인지적 관점 반영		사업설명서 성인지대상 기재사업설명서 작성		성인지 예산안 작성, 예산 반영		성인지 예산안 확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각종 보고서에 성별분리통계 조차 없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명확한 정책 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감사 기간 중 각 기관에도 요청하였으며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업무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작성에 대한 지침 실국에 공지('18.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성인지 예산사업을 작성할 경우, 성별분리통계, 성별격차 원인 및 해소방안 등 작성
<p>○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여성가족 정책실에서만 평가하는게 아니라 조직전체를 담당하는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법령·정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게 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업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5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사업 예산 : 1,846,840백만원(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 시정책심 3대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등) 총 85건 선정 - 성별분리통계 : 시정전반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추진계획 수립('17.7월), 서울시 성인지통계집 제작 배포('17.12월)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제7조⑤ 여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통계 업무 3. 양성평등 인식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여성가족정책실이 총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에서는 본 업무가 시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이므로 필요시 정기평가에 포함시켜 사업추진실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보완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특정성별이 60%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투자출연기관의 이사회를 보면, 교통공사, 시설공단, 에너지공사,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의 여성비율 저조함. 심지어 농수산식품공사, 주택공사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음. 향후 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위촉직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 우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기관 위촉직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40% 달성 ※ '18.1월 기준 위촉직 비상임이사 126명 중 여성이사 50명 ※ 위촉직 비상임이사 결원발생 시 여성우대 등을 통한 여성인재 추가 확보 ○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 정원 500인 이상 공사·공단 (3개 기관 : 교통, 시설, 주택)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성(性) 비율 지속 관리 - 서울관광재단 등 신규설립기관 이사회 구성 시 성비균형 강조
<p>○ 시민참여예산위원 민간전문가 출석률이 저조하니까 전문가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출석률이 저조한 전문가를 바꿀 등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예산위원 민간전문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2. : 시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 '18. 3. : 민관예산협의회(전문가) 재구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참여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음. 평가 내용을 보니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 현장에 대한 실습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직장인은 주말교육, 온라인교육 등이 있었음. 상설적인 교육을 진행 등을 검토해 보고 부서간의 협치를 통해 참여예산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연중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학교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 '16년 5회(3월) ⇨ '17년 16회(3, 8, 11월) - 심화교육 : '16년 3회(5월) ⇨ '17년 9회(4~10월) ○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상시 접수창구 운영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학교 상시운영 및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예산학교 부문·계층별로 확대(청년·여성·장애인 등) - 他 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계방안 수립(시정학교, 평생교육 등) ○ 참여예산 네트워크 사업 통해 소집단별 맞춤형 교육 운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위원회 3개 중복 및 6년 이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반된 사실이 있음. 향후 일괄하여 관리함으로 재위촉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총괄: 기획담당관, 협조: 민관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부서는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반드시 민관 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의를 거쳐야하는 “사전검토(스크린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담당자 교육 실시('17.1.3/ '17.8.29) 및 조례 위반 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사전검토의무 지속적 홍보 ○ 사전 검토 절차를 미준수하여 위원 위촉 시 중복 및 장기연임 위촉 문제가 발생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절차 미준수 부서에 위원 위촉 해제 및 재위촉 배제 요청 공문 시행 - 빠른 시정조치를 위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제 진행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유로 즉각 위촉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임기종료 후 재위촉 불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장기연임 해당 부서에 조기 해결 촉구 공문 지속적 시행 ○ 위원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위원회 간 위촉위원 현황 공유 ○ 중복·장기연임 사전방지 강화를 위한 ‘위원위촉 전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도 한 때 유행처럼 번지다가 지금은 잠잠해짐. 그때그때 유행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생태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박람회(10회),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운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위한 인건비(74억), 사업개발비(21억), 사회보험료(14억) 등 재정(109억) 지원 ○ 사회적경제 혁신형 사업 및 우수기업 육성으로 고용확대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형 사업(17개기업) 지원 ○ 광역지원센터 및 자치구 통합지원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컨설팅, 사업모델 개발 등 지원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17년말 현재 22개소 운영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11개) 특성과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등 사회투자기금 (150억)을 통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사회적경제 추진계획 수립 : '18.1월말~ ○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모·지원 : '18.2월~ ○ 임팩트투자 전문기관 대상 공모 실시 : '18.3월~ ○ 우수기업 모집 및 심사, 선정 : '18.9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제조업 특히 패션 봉제업의 경우 관련 업무가 '경제정책과', '문화융합경제과', '서울디자인재단', 'SBA' 등에 산재되어 있어 소공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하여 주기 바람.</p> <p>(총괄 : 조직담당관 협조 : 경제정책과, 문화융합경제과, 디자인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제조업 육성·지원은 경제정책과 총괄로 수제화, 인쇄, 귀금속, 의류(패션) 등 업종별 소공인 집적지구 중심의 특화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다만, 봉제업은 패션산업(디자인-봉제-유통·판매)과의 산업적 연관성을 반영하여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총괄하는 문화융합경제과 소관이며 디자인재단, SBA 등에서 개별사업 수행중임 ○ 향후, 도심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효율적 육성·지원 체계 마련과 연계하여 전담조직 설치 등 검토
<p>○ 퇴직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이 공사출연기관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최소화되도록 해주기 바람</p> <p>(총괄 : 공기업담당관 협조 :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투자·출연기관 안내·강조(공기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 제한대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및 승인절차 등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제도 운영(조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퇴직 당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4급 이상, 감사·조사·세무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 내 용 :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을 제한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제외)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제도 안내(조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 및 부서별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배부(수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산절약성과금제 관련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 공무원과 시민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즉, 시민이 제보하고 공무원이 발굴하는 식 등,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총괄 : 예산담당관 협조 :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을 통해 예산성과금제가 형평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 또한, 현재도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접수 시 공무원들이 제안내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시청사 1층 열린 민원실에 방문하여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신청 - 대상사례 : 강북구 삼양동 솔샘터널 인접 사면과 번동 오동골프연습장 주변에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던 서양등골나물(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시민의 제보로 사전에 발견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작업 완료 ※예산절감 추정액 : 5백만원 <p>→ '17년 사례로 '18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상정 예정</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및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학교 교육 및 비영리 민간단체 활용한 대시민 홍보 시, 예산절감 우수사례 등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여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독려 및 예산성과금제도 제도 안내 -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접근성 향상 - 시민들의 참여 확대 위해 기존 예산성과금 외에도 사례금 및 상품권 등 지급 확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소청심사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고, 감정 처리율도 높아 본연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 제 식구 감싸기 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변호사, 검사출신, 교수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여 소청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향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p>○ 정원조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격무와 행정수요 차원에서 증원하다는 명목으로 2017년에만 2번 정원증원을 했지만, 이에 반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정원 증원은 복지, 소방 등 대시민 접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위주의 확충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원내역 : +82명, '17. 7.1. /+168명, '17. 9.21. ○ 상대적으로 충원이 부족했던 본청은 중앙부처 대비 긴 초과근무로 인력확충 등을 통한 업무경감 필요성 증대하여 실무인력 373명 확충('18. 1.18.)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 : 중앙정부 : 22.1시간 / 서울시 : 40.9시간 ○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합리적 인력운용 등을 위해 조직진단 팀 신설하여 상시조직진단시스템 구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정원 조정 외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도시인프라의 관리유지비와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량화하여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올 한해 이것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없음. 성장정책을 펴다보니 공급위주의 서울시가 됨.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 인력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 몇 십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지도 모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인프라를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함. 기초실,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가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람 (총괄 : 안전총괄본부 / 협조 :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기반시설의 미래 상태 변화 · 필요비용 예측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7월) 지자체 최초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 ('17.~) 시설물 별 수명저하 등의 예측기준 및 선제적 관리방안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근거의 통합기준매뉴얼 수립 용역 추진 - ('18.~) 미래안전 및 경제적 효과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별 실태평가보고서 용역 추진(13개 부서) - ('19.~)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종합관리계획) ○ 서울시 재원확보 및 국가적 지원 방안 등 중장기 투자재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차원의 유지관리 투자재원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소요재원 적립,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수급을 고려 특별회계 또는 기금신설 등 재원확보 방안 검토 - 노후인프라에 대비한 국가적 지원방안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1. 발의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에 국비지원 방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TF 회의 지속 협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평가보고서 용역 추진 : '18. 상반기 ○ 도시기반시설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19.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도시경쟁력 지수, SOC 지출 관련 자료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된 시장 발언 자료들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지표가 정확치 않음.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고 책임 있는 자료 만들기 바람</p> <p>(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도시경쟁력 지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 시 시장 답변 중 도시경쟁력 순위 일부 착오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소명자료 제출('17.11.1) ○ 도시경쟁력 지수 현황 자료 시의원에게 제출('17.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지수(모리재단, PwC, AT커니, 머서, EIU) ○ 도시경쟁력 지수 서울시 순위 10년치 자료 제출('17.11.6.) ○ 도시경쟁력 평가 대응 관련 시의원 방문 설명('17.11.14.) <p>[SOC 지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SOC사업을 대폭 증액하지는 않았으나,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年평균 5.6% 증가) <p style="text-align: center;">〈 연도별 SOC 예산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data-bbox="592 1081 1437 1352"> <thead> <tr> <th>구분</th> <th>2011</th> <th>2012</th> <th>2013</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r> </thead> <tbody> <tr> <td>SOC (증감률)</td> <td>12,695 (△13.2)</td> <td>15,949 (25.6)</td> <td>16,811 (5.4)</td> <td>16,314 (△3.0)</td> <td>18,212 (11.6)</td> <td>17,152 (△5.8)</td> <td>20,447 (19.2)</td> <td>21,402 (4.7)</td> </tr> <tr> <td>하수도, 하천관리</td> <td>3,304</td> <td>5,539</td> <td>5,303</td> <td>5,613</td> <td>5,939</td> <td>5,829</td> <td>6,886</td> <td>5,751</td> </tr> <tr> <td>도시철도</td> <td>3,157</td> <td>4,561</td> <td>4,157</td> <td>3,430</td> <td>4,465</td> <td>5,047</td> <td>6,699</td> <td>8,505</td> </tr> <tr> <td>도로개설</td> <td>4,719</td> <td>4,353</td> <td>4,924</td> <td>5,052</td> <td>4,949</td> <td>3,330</td> <td>3,509</td> <td>4,062</td> </tr> <tr> <td>도로·시설물관리</td> <td>1,515</td> <td>1,496</td> <td>2,427</td> <td>2,219</td> <td>2,859</td> <td>2,946</td> <td>3,353</td> <td>3,084</td> </tr> </tbody> </table> <p>※ SOC예산은 도로개설, 하천·하수도,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토건사업을 대상으로 자본적 투자비(시설비)를 대상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기준(9개 분야)이 행정안전부 (13개분야 52개 부문) 분류기준과 상이하여 발생한 사항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도시경쟁력 지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쟁력 지수 순위 등 수치 자료 작성 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18.1~ <p>[SOC 지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외부 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자료 발취해 나가겠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SOC (증감률)	12,695 (△13.2)	15,949 (25.6)	16,811 (5.4)	16,314 (△3.0)	18,212 (11.6)	17,152 (△5.8)	20,447 (19.2)	21,402 (4.7)	하수도, 하천관리	3,304	5,539	5,303	5,613	5,939	5,829	6,886	5,751	도시철도	3,157	4,561	4,157	3,430	4,465	5,047	6,699	8,505	도로개설	4,719	4,353	4,924	5,052	4,949	3,330	3,509	4,062	도로·시설물관리	1,515	1,496	2,427	2,219	2,859	2,946	3,353	3,08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SOC (증감률)	12,695 (△13.2)	15,949 (25.6)	16,811 (5.4)	16,314 (△3.0)	18,212 (11.6)	17,152 (△5.8)	20,447 (19.2)	21,402 (4.7)																																															
하수도, 하천관리	3,304	5,539	5,303	5,613	5,939	5,829	6,886	5,751																																															
도시철도	3,157	4,561	4,157	3,430	4,465	5,047	6,699	8,505																																															
도로개설	4,719	4,353	4,924	5,052	4,949	3,330	3,509	4,062																																															
도로·시설물관리	1,515	1,496	2,427	2,219	2,859	2,946	3,353	3,084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동의안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 동의안을 위탁 시작 바로 전에 제출함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부족함. 향후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의 시의회 동의를 있기 몇 개월 전 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p> <p>(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사무를 개시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원칙적으로 같은 회기(하반기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p>*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정례회 이전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수시 안내하고 있음 -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일정 공지 -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공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 안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조직문화대책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리자의 리더십과 직원의 팔로우십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직원 사기진작분야에 직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담아 내지는 않은 느낌임.</p> <p>직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어야 하고 그 생각이 충분히 공유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p> <p>(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제 10호> 신규직원 대상 인사배치 및 업무분장 운영기준 마련 ○ 운영기준안 부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직원 배치 시, 주무과 및 과별 주무팀 배치 지양 -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기준 확정 후, 배치 자체 대상 부서 확대 - 부서장 책임 하에 인사담당 및 신규직원과 논의하여 부서 내 적절 업무부여 - 사무에 대한 이해 및 숙련이 필요한 업무는 신규직원 업무 분장 지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형태, 업무 분장 등 직원의견 수렴 지속 : '18.1월~ ○ 조직문화 혁신 T/F 구성·운영 :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그룹(희망자), 전문가그룹,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직원의견 수렴 확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마을변호사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신뢰 속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전역 424개 동에 803명 활동 중 - 동별 마을변호사 1~2명씩 배치하여 월별 1,200건 상담 - 모든 동에서 월 2~4회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운영 ○ 서울시 마을변호사 자격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희망하는 변호사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범죄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변호사 (서울시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문으로 의뢰) 3. 기타 특정 정당,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 <p>※ 마을변호사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및 마을변호사 활동 우수사업 수시공유</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중 행정심판 콘텐츠와 관련하여 명칭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바뀐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음. 각하율을 낮추기 위해서 선례집이나 재결집을 시민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유형 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하율을 낮추어야 함.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재결례집을 유형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어 관련: 조치완료 - 사건 관할 및 근거규정 내용 업데이트 완료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관련 내용 등을 업데이트 완료 ○ 각하비율 낮추기 위한 재결례 주요 사례 선별하여 재결례집 제작 및 온라인 상 사례 등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결사례 선별: '18. 1. ~ '18. 3. ○ 재결례집 제작 및 재결 사례 온라인 등재: '18. 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공기업을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적립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의 낮은 금리로 정기 예금을 맡기는 것 보다는 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이 나아보임. 공기업에서 불시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직원은 없음.</p> <p>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고 법령을 검토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 추진상황 : 완료</p> <p>□ 추진내용 : 운영 현황 전수조사('1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기관은 퇴직급여 운용자산을 정기에금 등 별도 사외적립이 아닌 유동성이 자유로운 사내예치방식으로 운영(장부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에금 등 사외적립비율은 전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3.5%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대부분은 교통공사(9,709억원, 82%), 시설공단(645억원, 5.4%), 주택도시공사(500억원, 4.2%) 3개 기관의 부채이고, 낮은 금리의 정기 예금이 아닌 사내예치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노사간 합의를 거쳐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SH공사 관련 지속적으로 빚과 자산이 줄어들고 있음. 채무 감축이 능사는 아님. 이는 공사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활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음. 자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관리비는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바람 (SH공사)</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공사 채무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0월 채무는 13.5조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이 5~6천억원에 달하여 채무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 지속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현재 채무 5조원/ 총부채 15조원 내외로 관리 중 임. - 공사에서는 증가하는 임대주택관련 부채의 증가로 추가적인 채무(부채)감축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서도 SH공사에 추가적인 채무감축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SH공사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SH공사에서는 택지매각, 주택분양이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보전하여 왔으나, 개발가능한 대규모 택지 고갈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 SH공사에서는 우선 구룡마을 등 신규 택지사업 발굴과 동시에 도시재생, 주거복지, 위탁개발, 리츠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 앞으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감소를 위하여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시행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직위표에 쓰여지려면 최소 4급 이상인데 5급인 민생경제자문관이 있음. 소속은 경제진흥본부인데 왜 직위표상 시장단에 있음. 민생경제자문관만 예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됨. 시정하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침해 근절대책 등 정책전반에 대한 자문과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주거복지 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자문 및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민생정책보좌관(3급 상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임기제 채용 계획심의(인사위원회) : '17.12월 - 전문임기제 임용협의 승인(행정안전부) : '17.12월 - 민생정책보좌관 신설, 임용 : '18. 1. 1.字 ※ 기존 민생경제자문관은 '17.12.31.字 폐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이상 직위에 한하여 간부 직위표 반영 제작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서울연구원 용역을 보면 서울시립대 교수 등 관련자가 별로 없음. 각종 연구에 있어 두 기관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총괄 : 조직담당관 협조 :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연구협의회(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를 통한 소통 및 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립대-연구원 공동연구 추진(연5~6건) - 시 학술용역 자문에 시정연구협의회 위원 참여 - 시립대 및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시 상호 자문 참여(연 40여명) - 기관 간 우수인력 상호 교환근무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 및 실적 등 연구정보 정기적 공유, 연구과제 수행 시 상호 자문실시 등
<p>○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 격무부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외에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 원활한 인사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검토하기 바람</p> <p>(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17.11.) 개최를 통해 '격무·기피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에 대한 방향 마련, 시행예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 (예시) 〉</p> <p>①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부서 평균재직기간, 직원설문 · 실·본부·국별로 격무·기피부서 명단 제출 · 부서별(2~3년)고충신청건수, 전출자 대비 전입희망자 수 등 <p>②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격무부서 희망근무자 사전 공개선발 후 '전문관' 지정 · 기피·격무부서 장기근무자가 선호부서 근무희망시 우선권 부여 등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군별 격무·기피부서(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실시 : '18. 상반기 ○ '19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통해 격무·기피 부서 최종 확정 : '18. 하반기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립대 입학전형료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입학 의사가 없는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p> <p>전형료는 실비 개념으로 폐지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p> <p>향후 입학전형료 폐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p> <p>(서울시립대학교)</p>	<p>□ 추진상황 : 검토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 해소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료 인하계획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원서접수 전형료를 폐지함. - 지원 가능횟수를 고려하여 학생 1인당 50~60만원의 전형료 비용 소요 -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전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60,000원), 학생부고교과(35,000원), 학생부종합(60,000원), 일반전형(35,000원), 정원의 특별전형(35,000원)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원서접수결과를 보면 수시는 작년 대비 14.95 대1에서 16.86대1로, 정시는 4.54대1에서 5.13대1로 상승하였음. ○ 이는 2017학년도 대비 논술전형 추천대상자를 각 고교별 3학년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꾸준한 상향 안정세와 고른기회입학전형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직업군과 연관된 전형이 2018학년도를 끝으로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상승, 그리고 학교 인지도의 꾸준한 상승세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소 입시 비용의 증가는 예상되나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됨.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험생들의 대학선호에 있어 전형료 폐지가 미치는 영향과 입시비용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동시에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전국 유일의 공립대 입장에서 국제화 지수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필요함.</p> <p>한국어 교육에 있어 시립대가 중심이 되어서 이를 추진하면 다른 자매도시와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의 어학교육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음. 경희대 등의 사립대학교는 이미 그러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음.</p> <p>공립대학교인 시립대학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바람 (서울시립대학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당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용 강의실 추가 확보 추진 - 입학 예정 학생의 주거 편의를 위한 행정 지원 : 시립대 부근 외부숙소 소개 및 기숙사 확보 추진 ○ 한국어학당 교육 다변화 및 확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등 교육대상 확대 -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당 전용 강의실 추가 확보 관련 유관부서 협의 및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 외부숙소 적극 안내를 우선 추진하고, 교내 기숙사 확보는 추가 건립 상황을 감안하여 검토 ○ 장기적으로 한국어학당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타대학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분석 및 추진 검토
<p>○ 자기 직무에 충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선이 필요하며 사기업의 우수 HR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바람.</p> <p>(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HR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미팅 : 3회 실시('18.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가 참여하여 민간기업 등의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공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선도 및 우수사례 기업 방문·면담 실시 : '18. 2월 ○ HR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조직문화개선 TF 구성·운영 : '18. 3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직원 복지제도와 관련 학자금대출의 경우 영국에서는 취업을 하고 일정소득이 될 때까지 유예를 했다가 기준이 되는 소득이 되면 갚도록 함. 이런식의 제도도 참고하여 주기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대여학자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대부금 재원을 지원받아 그 지자체 소속 재직공무원과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제도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li style="padding-left: 20px;">※ 지자체별 예산은 매년 연금공단에서 산정하여 반영조치 ○ 대부대상 : 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 ○ 대부금액 :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 본인 희망금액 ○ 상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장기교육, 자녀 미취업 등으로 대출부담이 있는 직원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도개선 건의('18.1.25)
<p>○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 시장의 아이디어를 바로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시의원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기 바람 (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HR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미팅 : 3회 실시('18.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가 참여하여 민간 기업 등의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공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선도 및 우수사례 기업 방문·면담 실시 : '18. 2월 ○ HR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조직문화개선 TF 구성·운영 : '18. 3월 <li style="padding-left: 20px;">※ TF에 HR전문가, 학계 등 다수의 외부인사 포함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격무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조직문화로 개선하여 주기바람</p> <p>(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17.11.) 개최를 통해 '격무·기피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에 대한 방향 마련, 시행예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안) 〉</p> <p>①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부서 평균재직기간, 직원설문 · 실·본부·국별로 격무·기피부서 명단 제출 · 부서별(2~3년)고충신청건수, 전출자 대비 전입희망자 수 등 <p>②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격무부서 희망근무자 사전 공개선발 후 '전문관' 지정 · 기피·격무부서 장기근무자가 선호부서 근무희망시 우선권 부여 등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군별 격무·기피부서(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실시 : '18. 상반기 ○ '19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통해 격무·기피 부서 최종 확정 : '18. 하반기 																																						
<p>- 또한 간부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직원들이 적응하기 곤란한 측면도 고려하기 바람</p> <p>(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승진·교육과전·공로연수·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적임자 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쇄적인 전보요인이 발생함 ○ 4·5급 간부에 대한 현부서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근 4년을 분석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부서 1년 미만은 줄어들고(14년 59%→17년 50%), 1년 이상은 점증적 증가 추세임(14년 41%→17년 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2017</th> <th>2016</th> <th>2015</th> <th>2014</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현부서 1년미만</td> <td>소계</td> <td>633(50%)</td> <td>583(47%)</td> <td>622(52%)</td> <td>648(59%)</td> </tr> <tr> <td>04급</td> <td>68</td> <td>57</td> <td>77</td> <td>137</td> </tr> <tr> <td>05급</td> <td>565</td> <td>526</td> <td>545</td> <td>511</td> </tr> <tr> <td rowspan="3">현부서 1년이상</td> <td>소계</td> <td>645(50%)</td> <td>645(53%)</td> <td>568(48%)</td> <td>442(41%)</td> </tr> <tr> <td>04급</td> <td>137</td> <td>152</td> <td>131</td> <td>55</td> </tr> <tr> <td>05급</td> <td>508</td> <td>493</td> <td>437</td> <td>38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필수보직기간(1년6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문성과 시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부서 1년 6개월이상 근무토록 보직관리 지속노력 ○ 필수보직기간 이내 전보희망자는 인사고충 인용 최소화 	구분		2017	2016	2015	2014	현부서 1년미만	소계	633(50%)	583(47%)	622(52%)	648(59%)	04급	68	57	77	137	05급	565	526	545	511	현부서 1년이상	소계	645(50%)	645(53%)	568(48%)	442(41%)	04급	137	152	131	55	05급	508	493	437	387
구분		2017	2016	2015	2014																																		
현부서 1년미만	소계	633(50%)	583(47%)	622(52%)	648(59%)																																		
	04급	68	57	77	137																																		
	05급	565	526	545	511																																		
현부서 1년이상	소계	645(50%)	645(53%)	568(48%)	442(41%)																																		
	04급	137	152	131	55																																		
	05급	508	493	437	387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조직문화개선과 관련 최근 일어난 사건(직원 자살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서 철저한 분석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건강이나 심리지원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제 6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복지 예산 증액 총65,102백만원(전년도 대비 8,605백만원 증액)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휴양시설 이용확대 : 1인당 0.7박 → 1박 수준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액 상향 : 1박당 75천원 → 100천원 · 공연·문화바우처 시행 : 연간 1인당 8매, 1매당 5천원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확대 : 가족캠프 2회 → 4회 · 사업소 직원대상 '찾아가는 쉼표 상당실' 확대 : 9개소 → 40개소 · 힐링교육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3회 → 5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후생복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8. 1월 ~ 12월
<p>○ 조직문화대책 직원 사기 진작 분야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담아내지는 않은 느낌임 -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듣고, 생각이 공유되어야 함 (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제 10호> 신규직원 대상 인재배치 및 업무분장 운영 기준 마련·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직원 배치 시, 주무관 및 과별 주무팀 배치 지양 - 부서장 책임 하에 신규직원과 논의하여 부서 내 적절 업무부여 - 사무에 대한 이해 및 숙련이 필요한 업무는 신규직원 업무 분장 지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기 등 우수사례 홍보(보도자료·시홈페이지 공개) : '18.6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5급이상 관리자에 대한 직원다면평가활용에 대해서도 5급 이상 승진대상자가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당황스러울테니 그러한 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제1호 “관리자 다면평가 확대시행 계획 안내(’17.11.1)”, 방침수립(’17.11.15) 후 시행홍보 ○ ’18년 상반기 인사를 위한 다면평가 시행(’17.11.27~12.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다면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노조 및 직원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평가대상·방식·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18.4.限 ※ 업무공지/공문 등 전 직원 대상 개선방안 홍보(’18.4~6월), 서울시 인사규칙에 다면평가 시행근거 조항 마련(’18.5월)
<p>○ 민관협의회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이유가 행정적인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업에 일관성이 없음.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도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의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방안 수립 중 - 다양한 민간전문가, 시의원, 자치구 의견 수렴(’17.9~현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2. : 시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립대학에도 연구소가 있고 서울연구원도 있는데 상호 기관의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중복되지 않은지? 협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관 간 소통이 잘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총괄 : 조직담당관 협조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과제개발 자문회의 시 중복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행계획서 작성 시 연구의 차별성 검토 및 연구과제 개발 자문회의 시 연구의 중복성 검토 - 연구원 연구과제 개발회의 및 자문회의 시 시립대 교수 참여 등 ○ 시정연구협의회(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를 통한 소통 및 협업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 및 실적 등 연구정보 정기적 공유, 연구과제 수행시 상호 자문실시 등
<p>○ 자치구별 행정심판 청구 편차가 심한 바 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목적 :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사례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분석대상 : 2017년 청구 본안사건 중 재결된 건('17.12.31기준) ※ 청구 1,614건, 재결 1,329건 ○ 분석내용 : 자치구별 청구현황·재결사례 분석, 유형별 대표 사례 선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 분석 : '18. 3. ○ 자치구·사업소 분석결과 통보 : '18. 4. ○ 주요 행정심판 인용사례 자치구 전파 : 수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9.1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17.12.15.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가결 ○ '17.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 4. 조례 제정(공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서울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당사자에게 심판비용 일부 보상
<p>○ 조직문화대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대안 방안 (총괄 : 기획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발표(1~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전 직원이 자유롭게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향식 방식의 실행과제 수립 및 시행 ○ “모두가 행복한 일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조직문화 혁신대책’ 시행” 보도자료 배포 (‘17.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서울시, 5급이상 관리자 승진에 ‘직원평가’도입 ”등 언론매체 보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R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조직문화개선 TF 구성·운영 : '18. 3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 이번에 업무보고 성비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신 것 같고 기초실에서도 53퍼센트의 직원이 여성인데, 앞으로 간부들 대부분이 남성이 아닌 상위 직급에 여성이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인사과)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12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개최 이래 5급 이하 승진 심사기준에 우수 여성에 대한 우선승진 배려 조항유지(적용)
 - “경합일 경우 현부서 및 당해직급에서 장기 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 여성, 고연령자, 다면평가우수자를 함께 고려한다”
 -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매년 증가추세 (서울시 17개시·도 중 1위)
 - '14년 19.4%→'15년 20.3%→'16년 20.8%→'17년 **21.8%**
 - ※ '17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인 21.1% 초과달성
- 〈 시도별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

구 분	임용실적		연도별 임용목표(행정안전부 제시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괄	11.6	12.1	13.0	13.8	14.7	15.5	16.4
서울	20.3	20.8	21.1	21.9	22.7	23.5	24.3
부산	14.0	14.7	15.8	16.9	18.0	19.2	20.3
대구	12.3	12.6	13.3	14.0	14.8	15.5	16.2
인천	12.4	12.5	13.2	13.8	14.5	15.1	15.8
광주	13.2	15.3	15.8	16.3	16.8	17.3	17.8
대전	14.2	14.6	15.5	16.4	17.4	18.3	19.2
울산	9.1	11.0	11.9	12.9	13.8	14.8	15.7
세종	12.7	12.9	13.7	14.5	15.4	16.2	17.0
경기	11.8	12.2	12.8	13.4	13.9	14.5	15.1
강원	8.0	8.5	9.5	10.6	11.6	12.7	13.7
충북	8.8	9.3	10.6	11.8	13.1	14.3	15.6
충남	6.3	6.5	7.2	7.9	8.6	9.3	10.0
전북	9.0	8.8	9.6	10.5	11.3	12.2	13.0
전남	7.8	8.0	9.0	10.0	11.0	12.0	13.0
경북	6.9	7.2	7.8	8.5	9.1	9.8	10.4
경남	7.7	8.5	9.6	10.6	11.7	12.8	13.9
제주	12.6	13.1	14.0	14.8	15.7	16.6	17.5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지속 달성 ('18년도 서울시 목표는 21.9%)
- 승진심사시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이 승진에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지속 인사관리
- 기획·예산·인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우수 여성인력 집중배치로 고위 간부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마련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각종 자문관 11명에 대한 현황 자료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관광마케팅 유상감자 이사회 회의자료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주주총회 회의자료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삼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 자료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이 됐을 때 프로필은 왜 공개하는지? 5년간 각종기관장 정보를 공개 해도 된다는 동의서 받은 것 제출 (인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4)
○ 초과근무 4시간 단위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직급별)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낸 기관 현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에서 금액 책정 근거?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시정시책연구 관련해서 수의 계약 기준이 되는 자료제출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자치분권 관련 정부 건의 내용(16,17년)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조례위반 사항(6년 이상 연임, 4개 이상 중복 위촉) (민관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17년 경영평가 다급 기관 경영평가보고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분쟁조정센터 위원 명단 및 직원 현황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내용과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내역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정규직 전환 전후 처후 변화를 인건비라든지 그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예산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 연도 별로 자료 요청(최근 10년간 연도별로 몇 명, 예산 포함) (국제교류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3)
○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내부회의 회의록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투자심사 관련 자치구별 정리 (최근5년, 국비/시비 구분, 심사시 금액과 실제 반영금액 표시 및 다르다면 사유 작성)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관리하고 있는 국제지수 10년 자료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국제지수 관련 의회 보고자료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중앙행정심판 자료 중 서울시 서울시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5년간 (인용률 타시도 비교)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BSC 관련 2016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분석 건수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2017년 업무환경 조정관련 자료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수상교통수단 확충사업, 피어테크 조성,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관련 - 시투자 심사결과 - 중앙투자 심사결과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BSC 공무원 청렴도 향상 지표 실국별 자료(5년치)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예산관련 기초실이 각 실국에게 내려보낸 편성지침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행감자료 4권 p3373 시정시책 연구현황 28, 31,33,40번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맥킨지 컨설팅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제목 수준으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
○ 5급 이상 서울시 여성 직원 나이와 부서 현황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6)